

# <금정소식지 3월호 의회면 게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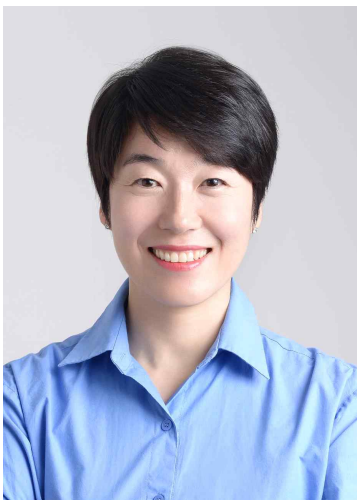
## 1. 금정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금정구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발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4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9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가결했다.

1월 27일 본회의에서 최봉환 의장은 장기적 경제 침체와 금리 및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금정구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2. 5분 자유발언



에너지 복지 취약 주민 발굴하고 고통경감 대책 수립 필요하다  
조준영의원(본회의 2차)

실내 마스크 의무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나겠구나’ 했지만, 고물가에 이어 대책 없이 맞은 ‘난방비 폭탄’에 정신이 아찔합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도 속출하

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정부나 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에너지 취약 주민 발굴 등 에너지이용에 주민 소외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도 4차례나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제 천연가스가격이 급등한 만큼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의 누적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가격도 작년 한 해 전년도 대비 50% 상당 급등하면서 결국 휘발유 가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도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 난방연료로 사용됩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만 매도하지 못하고 다행히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기존 난방비 지원 정책을 손봐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연일 경신해 대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는 1월 26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인 117만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로 인상해 30만4천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1일에는 바우처 비대상이었던 수급가구 포함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168만 가구에 59만2천원으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액 확대도 대상이 한정적이고 옮겨올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체계적 관리 없는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은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점,

무엇보다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2년도 예산보다 21%나 감소했던 예산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예측 능력도, 대책 마련 의지도 없는 ‘사후약방문식’,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땀 질’ 대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금정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0,587세대이고 이 중 2022년 12월 기준 지원대상 추정 가구는 6,999세대, 신청세대는 6,942세대

입니다. 미신청세대가 57가구지만, 중지세대가 274가구나 됩니다. 미신청과 중지의 이유는 평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신청주의 복지 사업입니다. 신청을 못하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홍보나 신청을 위한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신청주의 제도 한계를 봤습니다. 신청주의 한계를 넘기 위해 실제 삶을 잘 아는 구에서 더 능동적으로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관 기관이 분산돼 바우처 사용 관리도 미흡합니다. 구에서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정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복지와 관련해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을 멎진 수사로 쓴 업무계획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주민의 삶에서 무엇이 얼마나 결핍돼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취약계층의 범주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실천을 담보하는 내용이 계획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시, 구 차원의 지원 제도와 범주를 분석하고 긴 안목으로 자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신청주의 한계로 ‘몰라서 못 받거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에너지취약계층 발굴, 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넷째, 바우처 사용 시 정기적 관리도 해야 합니다. 사용률 분석, 사용률 저조 원인과 개선책 도출 등 정기적 안내도 합니다.

다섯째, 에너지원별 지원액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긴급 지원 등 부족한 난방비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액의 차이만 있을 뿐, 도시가스 외 등유와 연탄 등 다른 난방 연료에 따른 지원액 차등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제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등 자치 입법을 적극 추진합니다.

에너지취약계층 발굴과 대책 마련은 사람의 존엄과 직결되는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냉혹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을 위한 정치’를 다짐합니다.

‘따뜻한 행정’을 먼저 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인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재정비 촉구  
양달막 의원(본회의 2차)

저는 우리 주변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안전 점검 대상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주민들 일상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찾아서 점검하고, 재정비하자고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 기술 발달로 온천천을 따라 만든 보도와 도로는 ‘캔들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공법 등을 이용하여 온천천 쪽으로 향하여 보도(인도)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 관련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천장역 철재웬스의 안정성입니다.

2년 전인, 2020년 11월 12일 명륜역에서 온천천 난간대 기대던 남성이 9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천장역 철재 웬스로 되어있는 난간은 지지대가 없습니다. 추락 발생할 여지가 있는 난간에 지지대를 만드는 보완공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 듭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온천장역 2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사이 보도는 2m 이내의 넓이가 허공에 떠 있는 ‘캔들레버’ 구조입니다. ‘캔들레버’ 쉽게 설명하자면, 사진과 같이 ‘일정 면적 허공에 떠 있는 구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폭 3.5m, 총길이 190m이며, 준공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보도로 분류를 하다보니, 지금까지 한번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보도는, ‘「시설물 안전법」의 1.2.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이 현재 진화 발전하는 건설 공법, 관련 기술 등을 따라가지 못하여 생긴 ‘안전점검의 사각지

대’라고 생각 합니다. 온천장역 부근 보도와 함께, 부산대에서 구서동까지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3일 발생한 신도림역 육교 붕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교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의 보행교로 트러스 구조의 교각입니다. 개통한 지 6년 반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정기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신도림 육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려앉았습니다. 완성된 지 6년밖에 안 되었고 정기점검까지 받은 교량도 사고가 나는데, 완공된 지 오래되거나 노후 된 시설물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르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주체인 부산광역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 온천천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니는 보도가 지표면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 아닌, ‘캔딜레버보’ 방식 등의 보도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 중 ‘마’ 목, ‘그 밖의 시설물’ 대상에 ‘보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금정구청에서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요청 드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과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 책임 부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금정구 내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만약 있다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알려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는 선제적 예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가족들과 걷는 이 길이,지인들과 걷는 이 길이,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 길이, 사색하며 걷는 이 길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걷는 것이 당연히 느끼게끔 안전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더 주위를 챙겨보고 선제적 예방 대응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